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6. 3. 29.(화) 10:00		
배포일시	2016. 3. 24.(목) 11:00	담당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 기금운용계획과
담당과장	조용범 (044-215-7130) 김명규 (044-215-7170)	담당자	박상우 사무관 (044-215-7132) 박해정 사무관 (044-215-7171)

내년도 예산,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재량지출 10%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개혁 과제 등에 투자 - 「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」 확정 -

- ☐ 정부는 「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」을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·확정하였음
 -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
- ☐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,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
 - *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차, 작성요령, 각종 기준·단가 등은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

【재정 운용 여건】

- ☐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,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전망임

- 세입은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으나, 세출은 복지 및 의무지출, 성장동력 확충 등 지출 소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
 -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40% 수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

【재정운용의 기본방향】

- 구조개혁과 내수·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
 - 「24+1 핵심 개혁과제」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가운데,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
-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강화
 -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,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
- 경제·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
 - 생산가능인구 감소,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하여 재정 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재정규율 확립

【중점 투자 방향】

- ① 일자리 창출,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
 -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·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, '고용영향 자체평가*'를 통해 효율성 제고
- * (각 부처 시범사업)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→ 예산요구 → 전문기관 검증

-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 향상

2 창조경제 · 문화융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

-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강화, 문화 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ICT와 결합한 첨단문화산업 육성
- 기업 수출역량 강화, 신시장 · 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융합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

3 안보 · 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

- 북한 핵 · 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
-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응, 재난 관리 강화 및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 서비스 강화

【재정운용방식의 혁신】

1 재정운용의 자율성 · 책임성 강화

-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% 수준 구조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
 - 절감재원은 일자리,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
 -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추가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
 -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증감 등 인센티브 또는 재정적 불이익 부과를 통해 실효성 담보

- **쏠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출연금 관리 강화 등 유사·중복사업 통폐합 및 구조개편 추진**
- **재정준칙 도입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 확립 및 장기재정위험 관리 강화**
- **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, 협의된 재정지원 기준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규율 강화**

⇒ **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,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기반 마련**

② 재정운용 소단계에 걸친 효율성·투명성 제고

- 재정사업의 진입·퇴출 관리 강화를 위해,
 -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
 - 3년이상 계속 보조사업은 **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**
-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,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'**집행현장조사제**' 도입
-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재정사업 평가를 **통합재정사업 평가**로 개편하고 **재정혁신 지표 도입** 등 평가 실효성 강화

⇒ **지출소요 대응기반을 조성하는 한편, 재정누수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**

③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

-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은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

* ‘고용복지+센터-창조경제혁신센터(고용존)-대학창조일자리센터’ 연계 강화

- 한국재정정보원 설립, 재정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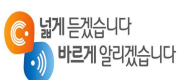
⇒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·체감도 제고를 통해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저변확대

【향후 일정】

- 동 지침은 3.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,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.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,
 -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를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.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
- ※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일정이 전년 대비 10일 정도 당겨지고, 2014년 대비 1개월 당겨짐

* (참고) 예산순기 변화 ('14년 → '17년)

-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: 4.30일 → 3.31일
-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: 6.30일 → 5.31일
-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: 10.2일 → 9.2일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

경제부흥 · 희망사회 · 국민행복

자원배분의 중점

- 일자리 창출, 맞춤형 복지로
서민생활 안정
- 창조경제 · 문화융성 연계 등
미래 성장동력 확충
- 안보 · 치안서비스 강화로
국민 안심사회 구현

재정운용방식의 혁신

- 재정운용의
자율성 · 책임성 강화
- 재정운용 전단계에 걸친
효율성 · 투명성 제고
- 재정운용에 대한
국민체감도 향상

< 기 본 방 향 >

- ◆ 구조개혁과 내수 · 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
- ◆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
- ◆ 경제 · 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